

# 日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공식화

### 여야 5당 "수출규제 철회"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모색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지난 31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 식당에서 여야 5당, 정부, 재계, 노동계가 모여 첫 회의를 열고 기구 운영 방안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여야 5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운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김병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민관정 모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는 한편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정 협의회 설치 목적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여야 답과를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라고 부연했다. 정진석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 우리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해 당장 협상을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 차례도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이용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성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일 평화당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우리도 단호한 대응조치가 필요하지만 감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권도 친일, 반일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기업 피해가 최소화

하고 핵심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반도체 소재 산업 경쟁력을 위해 화광법과 화관법 완화, 52시간 노동시간 특례화, 산업안전법 개정, 법안제 상속에 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가 원칙없이 수용할 태세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대표로 발원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에서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어떤 형태든 수출과 무역 모두 기업간 거래다. 기업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각종 제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지원 등 입법 지원과 열린 자세로 기초기술 확보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일

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훼손하며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에 악화를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 결정 취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집행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첫째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현장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둘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셋째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집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 “北 미사일, 韓 평화 노력에 부정적”

### 靑, 긴급 NSC 열고 “강한 우려 표명 軍에 대해 동향 주시 대비태세 철저 유지”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여러 발의 발사체를 또다시 동해상으로 추가 발사하면서 청와대는 지난 31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련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다음 주로 연기됐고, 당초 오후에 예정됐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도 오전으로 앞당겨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6분과 27분께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각각 한 발씩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뒤 6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24시간 대응하고 현장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둘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셋째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집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영위를 열고 중·러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현안질문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직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연기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로 오는 7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전 9시 넘어 국회로 향하려고 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도 발길을 돌려 업무 전선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운영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 3시 정 실장 주재 NSC 상임위를 열고자 했지만, 국회 상황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전 11시로 앞당겨 진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 만에 또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오전 11시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직후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

## 문 대통령, 靑 참모회의서 김지태 유족 소송 대리 후일담 소개

### 野 “친일파 유족 소송 참여 변호인” 주장에 반박인 듯 김지태씨,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에서 간부로 활동 경력 문 대통령, 변호사 수임료 등을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기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과거 인권·노동 변호사 시절 고(故) 김지태 씨 유족들의 법안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 취소 소송 당시 변호인으로 나섰던 후일담을 소개한 것으로 지난 31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친일 행적”, ‘토착애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현안 보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씨가 1927년부터 5년간 일본 식민지 수탈 기업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을 근거로 “친일 행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다만 같은 기간,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에서 간부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김 씨는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연일 ‘친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1984년 김 씨가 사망한 후 그의 유족들은 김 씨

가 남긴 재산의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문 대통령도 함께 변호를 맡은 공동 소송대리인이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3년 뒤 유족들은 김 씨가 남긴 (주)삼화와 조선견직의 50억원 상당의 법안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회사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도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성공 보수와 변호사 수임료를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기부했고, 당시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돌이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후일담 소개는 문 대통령이 친일파 유족 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한 우회 반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

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꼭 꼭 의원뿐 아니라 그쪽(한국당 쪽)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29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려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으며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지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왔다”라며 “이 정도면 친일로 분류하고 토착애국가 불러 찬부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이러한 의혹 제기기에 대해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이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곽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일 명단에 ‘뺀다’고 하는 것은 원래 (명단에) 있었던 사람을 뺀다고 할 때를 말한다”며 “(김 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스

## 민주연구원 “한일 갈등 보고서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31일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출된 데 대해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왔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내 의원들에게 발송한 한일 갈

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자에

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명 자료를) 발표한 게 전부”라며 “그 맥락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30일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대외 비로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뉴스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9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 2019년 8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 중부비전센터

주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전북지방자치TV  
후원 | 동아보건대학마술학과, 전주시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9-9700